

이 자료는 2002년 2월 1일 조건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道資料

擔 當	유 럽 팀
	이종화 부연구위원
電 話	3460 - 114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 CGE모형분석을 중심으로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安忠榮)은 1월에 보고서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분석을 중심으로』를 출간하였음. 본 연구는 중·동구 10개 국가의 EU 편입이 완료되는 2008년 경, 한국과 EU와의 교역관계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시, EU의 공동통상정책의 확대 적용으로 인해 무역 측면에서는 관세인하의 혜택이 발생할 수 있으나, EU의 반덤핑 조치나 CE마크, Eco-Label 등의 제품기준조화 문제가 중·동구 국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한국을 포함한 역외국에게 불리할 수 있음.
 - 둘째, 가공식품, 화학, 철강 및 기타 제조업의 경우, 중동구권 국가에서는 생산이 감소하고, 이들 지역으로의 한국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동구권 국가가 반덤핑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셋째, 자동차와 의류산업은 현지진출이나 기존의 현지생산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는 중동구권 국가에서 이들 산업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성장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고, 한국의 수출이 둔화된다는 분석에 근거함.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동구권 국가의 수출은 크게 증가하고, 한국의 수출은 137%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네째, 한국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섬유산업의 경우, EU와 중동구권 국가에서의 생산은 큰 변동이 없고, 한국의 수출은 감소하기 때문에, 세계최대규모의 단일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수출진흥대책이 필요함.
 - 다섯째, EU확대는 세계최대규모의 단일시장이 탄생됨을 의미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FTA와 지역블록의 창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02. 1.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I. 서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회원국 확대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애초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창설 이후, 수차에 걸쳐 회원국을 확대해 오던 EU가 수년전부터 EU에의 가입을 희망해 오던 중동구 국가들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EU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10개의 중·동구국가들(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EECs)과 사이프러스, 말타, 터키 등 모두 13개국에 이르며, 이들 모두와 가입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적인 EU의 확대는 전례없는 것으로 EU에게는 물론 이들 가입희망국 모두에게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990년대에서부터 비롯된 중·동구 10여개 국가들과 EU간에 체결된 유럽협정(Europe Agreement)은 무역자유화나 여타 무역관련 이슈뿐 아니라 정치대화, 법률적 문제, 산업, 환경, 수송, 통관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을 포괄한다. 무역분야에서 **同** 유럽협정은 EU와 가입 희망국인 준회원국간에 상호주의(reciprocity)에 입각하되 비대칭적인(asymmetric) 방법에 입각한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목표하고 있다. 비대칭적이라 함은 달리 말해 자유화의 속도가 가입 희망국보다 EU에서 더 빨리 추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비대칭적 무역자유화 과정으로 인해, 1995년 이후 이들 준회원국의 농산품과 섬유제품 등의 몇몇 민감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이 무관세로 EU시장에 들어오게 되었다. **同** 유럽협정은 이같은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은 물론 노동자의 자유이동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동 협정체결 상대국에서 설립되고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EU가 중·동구 10개국가 및 사이프러스, 말타, 터키 등 총 13개국을 편입하게 될 경우, 기존 15개 EU 회원국 이외에 추가적으로 1억5백만의 소비자와 34%에 해당하는 지역의 증가를 초래하여 확대된 EU 지역 역내 및 역외지역과의 무역 및 투자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한 무역규범체계, 단일한 관세, 단일한 행정절차체계 등은

기존 EU회원국뿐 아니라 확대된 EU의 단일시장 전역에 걸쳐 적용될 것이다. 또한 신규회원국에게도 적용될 EU의 공동역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별 관세보다도 평균적으로 더 낮은 편이다. 따라서 EU로부터 GSP 등의 특혜를 받고 있는 역외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EU확대란 다름 아닌 신규시장의 확대를 의미한다.

II. EU 확대의 역외국에 대한 파급효과

그러나, 한국의 경우 EU의 무역특혜제도인 GSP의 혜택이 1998년에 중단된 상태이므로 상기한 바와 같이 확대된 EU시장에의 접근에서 개도국이 누릴수 있는 일방적인 이득은 없을 것이며, 여러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확대된 EU시장은 높은 구매력을 가진 거대시장이라는 매력과 함께 단일한 무역규범체계, 단일한 관세, 단일한 행정절차체계 등으로 무역거래에 있어서 기존 중·동구국가와의 교역에 비해 어느 정도의 거래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한국산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중·동구국가들이 EU에 가입하게 되면 EU의 공동통상정책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므로 한국산 제품의 수출에 다소 불리할 수 있다. 아울러, EU의 기술적 장벽이라 할 수 있는 EU의 인증제도인 CE마크제도나 환경라벨(Eco-label)제도 등이 중·동구 국가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시장확대에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U확대가 역외국에 미치는 최종적인 영향은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 있다. 이점에 있어서 본 연구는 EU확대의 영향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로, EU확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로, 한국의 각 산업은 EU확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III. CGE모형분석의 결과

분석방법으로는 15개 산업 9개국으로 구성된 일반균형연산(CGЕ)모형을 이용하였다. 완전경쟁에 기초한 기존의 제1세대 CGE모형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활용된 CGE모형은 불완전 경쟁과 규모에 대한 보수증가를 가정하였다. 무역정책의 변화로 인한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불완전 경쟁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구조와 무역자유화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새로운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무역자유화는 기업을 보다 경쟁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친경쟁적 효과(pro-competitive effect)를 창출한다. 이러한 친경쟁적 효과는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독점적 경쟁과 규모의 경제를 가정한 본 연구의 CGE모형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과 더불어 친경쟁적 효과를 함께 파악한다.

EU확대는 중동구권 국가와 EU간의 관세철폐와 공동무역정책의 실행을 비롯하여, 산업표준화, CE마크제도 등 수많은 법적 제도적 단일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모든 변화를 실증분석에 포함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인 관세철폐와 공동무역정책의 실행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CGE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EU확대로 인해 해당 당사국인 EU와 중동구권 국가의 국내총생산과 후생은 증가하는 반면, 한국을 비롯한 제3국의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확대라는 지역블록의 외연확장이 제3국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생이 5.89% 증가한 헝가리가 EU확대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반면, 한국의 후생은 0.04%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전체로 볼 때, EU와 중동구권 국가의 후생증가가 제3국의 후생감소를 상쇄하고 남아, 세계경제의 등가변환은 41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생의 변화는 몇 가지 요인으로 분리될 수 있다. 우선 전통적인 무역이론에서 제시하듯이, 무역정책의 변화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교역조건

의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불완전 경쟁하에서의 무역자유화는 친경쟁적 효과를 창출하고, 이는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후생이 감소된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교역조건이 악화된 것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도 실현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EU와 헝가리의 경우, 3요인 모두 후생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 산업은 자동차산업이다. 중동구권 국가의 자동차 생산은 평균 25%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0.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동구권 국가의 수출은 크게 증가하고, 한국의 수출은 1.37%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자동차 수출의 지역별 변화를 살펴보면, 헝가리와 기타 중동구 국가를 제외하면 전 국가로의 수출이 감소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사용한 산업별 규모에 대한 값의 평균치를 이용하였다. 이와는 달리 기존연구에서 사용한 규모의 값을 그대로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모든 변화의 절대적 수치는 규모의 값에 따라 약간씩 달리 나타났으나 그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왜곡되지 않고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CGE분석을 기초로 한국 산업별 대응방안과 한국경제전반에 관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공식품, 화학, 철강 및 기타 제조업의 경우, 중동구권 국가에서는 생산이 감소하고, 이들 지역으로의 한국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동구권 국가가 반덤핑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동차와 의류산업은 현지진출이나 기존의 현지생산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동구권 국가에서 이들 산업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성장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고, 한국의 수출이 둔화된다는 분석에 근거한다.

셋째, 한국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섬유산업의 경우, EU와 중동구권 국가에서의 생산은 큰 변동이 없고, 한국의 수출은 감소하기 때문에, 세계최대규모의 단일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수출진흥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중동구권 국가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EU확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본 연구의 CGE분석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단지 수치만으로 해석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EU확대는 세계최대규모의 단일시장이 탄생됨을 의미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EU로의 진입과 입지확보는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EU확대는 현재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확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지역주의의 확대가 세계자유무역체제의 확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경제이론이 존재하지만, 이들 이론은 지역블록에 불참한 국가가 피해를 입게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FTA와 지역블록의 창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EU확대라는 지역주의의 확대는 한국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각 산업은 적절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며, 거시적으로는 지역블록의 참가 또는 FTA의 창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확대로 세계최대규모의 단일시장이 형성되고 EU의 국제적 입지는 증대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동구권 국가가 갖는 전략적 입지의 중요성도 점차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들 국가와의 밀접한 관계형성은 장기적으로 단일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이다.